

광주시-포스코이앤씨 ‘SRF 갈등’ 여전히 평행선

정준호 의원 ‘중재 취하’ 제안 불발

포스코, 운영 계약 해지 긍정 입장

市 “합의는 불가…소송 집중” 고수

정지권이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분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최근 SRF 중재 심판 취하 후 과거 손해분만 별도로 협상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광주시가 법적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협의가 불발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 대상사 중재위원에서 진행 중인 광주 SRF 손해 배상 중재심판을 취소하고 2017-2024년 발생한 과거 손해 분만 별도 협상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미래 운영비는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가 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시가 환경공단에 SRF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비용 부담 대신 시설 보수를 자부담으로 진행해 신규 사업자 이관 시 공정 처리가 원활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함께 내놴.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가 운영 계약 해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반면, 광주시는 중재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중재로 접수된 사안이기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중재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게 핵심인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해지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귀책 주체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진다”며 “현재 시점에서 협의나 해지 검토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정준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협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번 제안은 광주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SRF 정치화가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협의가 아닌 심판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광주시는) 중재 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판대리인 보강도 마친 상태였다. 광주시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심판 결과에서 최대한 광주시에게



광주시 장애인체전 결단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구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에게 단기를 전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길 기원한다”며 “언제든 광주시의 요청이 오면 다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27일 예정된 8차 중재 심리에서 손해 감정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결과

도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측 간 ‘SRF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공공비축미 19만t 매입 ‘역대 최대’

전년비 26.4% 증가…전국의 30.5%

산물벼 11월말·포대벼 12월말까지

전남도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 19만t을 매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도의 올해 매입 계획량은 일반벼 10만1천t, 친환경벼 2만9천t, 산물벼 3만1천t, 가루쌀 2만9천t이다.

이는 전국 매입량 62만5천t의 30.5%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남도의 연도별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2021년 12만3천t, 2022년 15만3천t, 2023년 14만1천t, 2024년 15만t으로 올해는 이보다 매입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는 11월30일까지 농가 편의를 위해 미국종합처리장(RPC)·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매입한다. 포대벼는 오는 12월31일까지 농가로부터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매입한다.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 대상은 시·군별 2개 이내 품종으로 지정하고 지정 품종 외 품종으로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 이내 표본추출)하고, 매입 종료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한다.

쌀 생산 조정을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벼로 신규 전환한 물량은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친환경벼매입 품종은 일반벼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벼는 회수 또는 일반벼로 전환하며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취소와 5년간 공공비축 참여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80kg 기준)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 전국 단일가격으로 매입한다.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 4만원이 지급되며 최종 정산금은 12월31일까지 지급 예정이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어렵게 맺은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매입 품종 확인과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공공비축미 매입 작업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매입 현장 이동 시에는 교통사고 예방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無원칙 인사’에 전남도청 하위직 ‘부글부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배제했던

승진연수조정 하반기·수시인사적용

“1년 후배보다 승진 뒤처졌다” 토로

전남도가 최근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하반기 수시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일자로 과장급(4급) 이하 공무원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신선폭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등에 따른 승진·전보인사로 인사 규모는 과장급(4급) 3명, 팀장급(5급) 7명, 6급 이하 30명 등 총 46명이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승진에서 배제된 일부 7급 승진 대상자다.

8급에서 7급 승진의 최저 연수가 기존 2년에서 지난해 6월 1년으로 조정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 적용되지 않았던 해당 조정안이 하반기 정기·수시 인사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승진에서 배제된 일부 직원들의 경우 1년 늦게 입직한 후배들보다 뒤처질 수 밖에

없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지난 17일 ‘근거 없는 승진 제한에 대한 인사 부서의 설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25년 7월30일자 인사발령에서 승진 대상자에 들었음에도 승진이 배제된 사무관리비당사자 8급 직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직원은 “하반기 승진에서 1년 늦게 입직한 후배들이 이제까지 적용 받지 않던 승진 최저연수를 적용받으면서 피해는 이룰 말할 수 없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직원은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시키지 않고 우리가 승진에서 배제된 하반기 인사에서 1년 후배들을 승진시켜 후배들보다 뒤처지게 만든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인사 담당 부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총무과 관계자는 “승진 소요 연수가 당겨지다 보면 일시에 너무 많은 승진자가 나올 수 있고 업무 경험 또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상반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생한 직원들이 승진 혜택을 더 많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시원 기자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HAM PYEONG 대전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국제관광재단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국향동호회